

남북 정상, 분단 이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서 첫 만남

[남북정상회담 D-9]

오는 27일 정상회담...판문점, 유엔군사령부 관할 적국 최고지도자 의장대 사열 주목...오늘 실무회담

남북이 정상회담을 열흘가량 앞두고 의전·경호·보도 관련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두 정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 나란히 서게 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당일인 오는 27일 오전 방탄 기능이 탑재된 전용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츠 S600으로 알려진 이 차량은 지난 2015년 10월 독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지난날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영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은 판문점 북측에 있는 72시간다리와 '통일각'을 지나 판문각 앞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 앞 포장도로에서 하차해 남북을 구분하는 MDL을 도보로 넘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MDL 위에 지어진 건물인 T1과 T2 또는 T2와 T3 사이로 걸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MDL을 도보로 넘어올 경우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평화의집까지 도보로 이동하거나, 경호 문제를 고려해 짧은 거리지만 두 정상이 차를 타고 평화의집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은 유엔군사령부 관할로 남북 모두 1개 소대 병력만 유지할 수 있고, 중화기는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변 위협 요소가 최대한 제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경호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차량을 타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앞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지난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때 1001마리를 끌고 방북할 때 이용했던 도로를 이용해 된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비포장 상태이긴 하지만 차량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태다. 지난 2015년 8월 남북 고위급회담 당시 북측 대표였던 김양건과 황병서도 이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앞까지 이동했다.

의장대 사열 문제를 어떻게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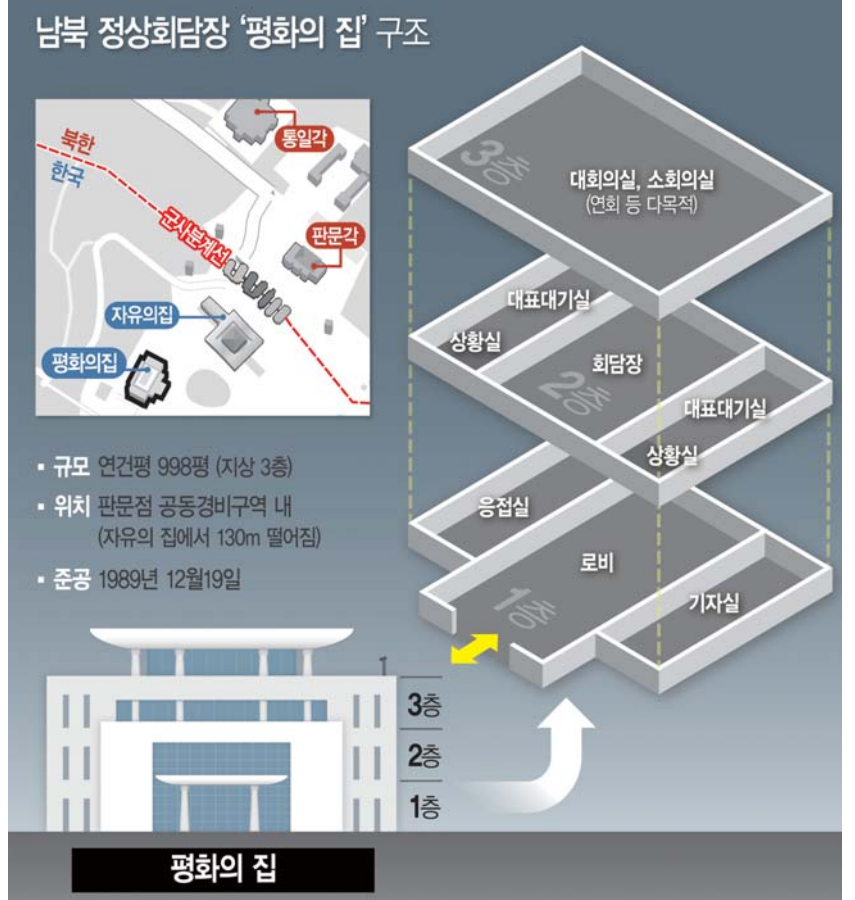
별지도 주목된다. 의장대 사열은 최상의 예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방북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방북 때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국(敵國)의 최고지도자'인 데다가, 전례가 없는 만큼 국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이 선제적으로 적국 국가원수의 의장대 사열을 받긴 했으나, 단순 비교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의장대 사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열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권

위'에 흡집이 날 수 있는데다가, 사열하는 모습을 통해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날 중국 방문에서도 중국군 의장대를 사열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의장대 사열에 관한 접점을 찾았다고 해도 장소가 제한적이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어서 정상급 의전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예포 발사 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외부 공간이 도열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평화의집 또한 내부 공간이 협소해 의장대 사열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장 '평화의 집' 내부(추정).

남북은 18일 판문점에서 북측 통일각에서 경호·의전·보도 후속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회담 형식의 실무 조율은 마무리하고, 이후 현장 중심의 정상

회담 준비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경우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DJ·盧의 숙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되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의 핵심요소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례화를

추진했지만 북측의 난색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회담 정례화는 남측과 북측이 교대로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측을 방문할 상황이 안된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양측 중립지역인 판문점에서 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지역을 상징적으로 밟게되면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을 위한 물리적 부담감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단 하루에만 진행된다는 점도 수시 개최와 정례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의전과 격식 부담을 줄인 실무형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정착될 계기가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날 1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루에만 진행하는 이유 관련 "예전처럼 정상회담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위급과 실무형으로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판문점회담'이란 형식이 남북간 새로운 (회담)방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판문점 개최는)북한 방문이나 남측 초청 방법에 비해 경호 등 훨씬 모 든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아주 좋다"고 정례화를 기대했다.

부 측 정권 교체기에 열려 정례화되기 연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합의내용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려면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앞서 두차례 정상회담 합의내용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었다.

중립지대 판문점·하루회담으로 실무형 회담 정착 용이 문대통령 집권초 회담 개최로 추가 정상회담 안착 가능성 국회 비준 과제...北재정의·역사적 합의 정쟁 대상 우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집권초에 열린다는 점도 정례화 가능성을 높인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안정적인 추가로 더 열린다면 정례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은 각각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은 지난날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UN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반문한 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는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한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사적 합의가 자칫 국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윤러 국회 비준동의권이 적용된다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국가 간 조약으로 간주해야하는데, 우리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재인식할 것이냐는 본질적인 물음을 풀어야한다는 속제가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